
『2010 OECD 농업각료회의』 참석을 위한 프랑스 출장 보고서

I. 출장 목적

- ☐ 2010 OECD 농업각료회의(2.25~26) 및 동 회의전날(2.24) 개최된
“축산업과 기후정책: 육류 감소 또는 탄소 감소?”를 주제로 한 지
속가능발전 라운드 테이블 참석

II. 출장기간 및 상세일정

■ 출장기간 및 지역

- ☐ 기 간: 2010년 2월 23일(화) ~ 28(일) (4박 6일)
- ☐ 지 역: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 출장자: 이명기 부연구위원

■ 상세일정

일자	주요 일 정	주요 내용
2/23 (화)	○ 서울 인천공항(14:00) → 프랑스 파리(18:00) - 편명: Korean air 901	
2/24 (수)	○ 25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라운드 테이블 참석(14:30~18:00)	◆ “축산업과 기후정책: 육류 감소 또는 탄소 감소?”를 주제로 토론
2/25 (목)	○ 2010 OECD 농업각료회의 참석(14:10~20:00) • Opening Session(각국 대표 발표 및 토론) • Working dinner(국제기구 대표 발표 및 토론)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식품정책”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각국 및 국제기구 대표가 발표하고 토론
2/26 (금)	○ 2010 OECD 농업각료회의 참석(9:30~16:30) • Morning Session(그룹별회의) • working lunch(공동의장이 회의 요약 발표) • 폐회식(각료선언문 발표) • 기자회견	◆ 그룹별 회의를 통해 도 전 극복을 위한 과제와 OECD의 역할을 토론 ◆ 회의 요약을 거쳐 각료 선언문 발표
2/27(토) ~28(일)	○ 프랑스 국제농업박람회 참석(통상관) ○ 프랑스 파리(27일20:35) →인천(28일 15:25) 편명: Korean air 902	◆ 전문 작성

Ⅲ. 회의 참석 결과 보고

□ 25회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회의 결과보고

2010.2.24(수)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축산업과 기후정책: 육류 감소 또는 탄소 감소?"를 주제로 25회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회의가 개최되어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수석대표 이창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김영수 사무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 부연구위원 등 참석)

1. 핵심요지

- 금번 회의는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감축의 필요성,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는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국제 사회의 인사들이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과 식량안보와 환경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라는 현재 세계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출발하였다. 회의 참석자들 식량안보 및 환경문제(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축산업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시장관련, 생산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관련 정책들,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될 과제들, 정책입안자, 생산자, 소비자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참석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토지이용의 변화가 필요하며, 탄소발자국, 탄소 가격(탄소세 등), 배출권 거래제 등 소비자 정도를 제공하고 시장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국제적 논의, 협력, 합의가 중요하다고 동의하였다.

2. 세부내용

< 축산업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가? >

- 축산업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18%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이와같이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원인 중 하나는 헝가리 등의 국가들이 지적하듯이 많은 축산물이 축사에서 사료를 먹여 키우는 집중생산방식을 통해 생산되기 때문이다.
- 탄소 대기 농도를 450ppm CO₂ep에 안정화시키고 세계 평균 온도 변화를 약 2도 상승에 제한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총 배출량을 2000년 수준에 비해 2050년까지 약 40% 정도 감축시켜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축산업이 직면한 핵심 이슈는 무엇인가? >

- 축산업은 다른 농업부문에 비해 보다 온실가스 배출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하다.
 - 미국 등의 국가들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가가 주요 관심 사항이라고 언급하였다. 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료작물 생산 또는 초지를 위한 토지 이용의 증가가 개도국에서의 토지 이용 변화 및 탈산림화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토지 이용의 변화가 중요하며 축산업의 축소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되는 것이다.
- 그러나 축산업은 소비자에게 영양 공급의 주요 원천이며, 생산자에게는 소득의 수단이다.
 - 개도국의 농민에게 초지를 이용한 또는 방목에 기초한 축산물 생산은 몇몇 중요한 농업형태 중 하나이다.

- 축산물을 포함한 농식품 생산은 세계인구가 2050년까지 90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증가가 필요하다.
- 핵심 이슈는 축산업의 주요 특징과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 그러나 정책은 지역적으로 또는 생물다양성 및 식품안전성과 같은 정책 목표의 범위에 따라 다를 것이다. 또한 정책은 생산 시스템과 소비자 수요의 특징, 그리고 이 둘간의 상호 작용을 반영하여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

- 수요 견인 축산업의 경우 생산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집약적 생산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 경우 온실가스 관련 정책은 생산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나 전반적인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할 것이다. 또한 생태시스템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압박도 증가할 것이다.
- 감축 요구에 기초한 축산시스템의 경우 축산물 수요 증가를 제약하며, 엄격한 공급 측면 제약은 다른 용도사용에서의 기회 비용이 매우 낮은 한계토지에서의 축산물 생산을 줄일 것이다. 생태학적 제약 요구에 기초한 접근방법은 생태시스템에 대한 압박을 크게 줄여줄 것이다. 또한 축산업의 전반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줄 것이다.

<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장 관련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

- 탄소세를 포함한 탄소 가격 정책, 탄소 배출 상한, 배출권 거래제, 식품의 탄소 발자국 정보 제공 등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 측면에서의 정책이다.

- 소비자의 식품 선택은 온실가스 배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가 탄소 배출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게끔 하는 -예를 들어 축산물 소비를 줄이든지 또는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방법으로 생산된 축산물을 소비-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은 식품의 탄소발자국과 같은 라벨링이 소매업자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옵션이라고 언급하였다.
- 탄소 가격(예: 탄소세) 정책과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스템(배출권 거래제)은 탄소 집약적인 생산물 생산을 탄소 집약도가 낮은 생산물 생산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시장을 이용한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실제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시스템 및 정책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
- 탄소 가격과 소비자 정보 제공의 결합은 소비자 행위를 바꾸는 가장 좋은 정책일 수 있다. 라벨링 또는 다른 정보 제공 수단, 그 자체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농업부분에 탄소 가격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식품 가격을 상승시켜, 정보 제공 정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할 수 있다. 가격은 소비자가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 효과적인 시장 관련 정책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될 과제들은 무엇인가? >

- 라벨링은 실행하기에 까다로울 수도 있다. 똑같이 보이는 두 상품이 기후 조건, 동물 종, 토양, 영농방식 등의 차이에 의해 탄소 발자국(배출량)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데이터) 수집을 위한 LCA(Life Cycle Assessment) 도입이 필요하다. 탄소 발자국 라벨링이 보다 정확할 수록, 더 많은 소비자가 저탄소 식품을 소비하겠지만, 라벨링 시스템은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할 것이다.

- 논의된 또 다른 이슈들 중 하나는 상품간에 탄소 배출을 비교할 수 있는 단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이다. 즉, 킬로그램 당 배출량, 칼로리 당 배출량, 또는 표준화된 영양가치 단위당 배출량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이다. 단위 선택시 생산과 유통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민관간, 국제간 협의가 필요하다.
- 탄소 가격 정책의 가장 큰 혜택은 산업화된 국가의 농업인이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하고 토지 이용 결정 시 탄소 배출정도를 고려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일 것이다.
- 이와 같은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공급 체인상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이다. 농가의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하고 증명하는 시스템 구축은 경제의 다른 부분에서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것에 비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즉, 더 정확한 라벨링은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 탄소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토양의 탄소량과 같이 농장의 자세한 특성을 측정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으나 다양한 생산 시스템, 지역, 기후를 반영하기 위해 대표적이고 정확한 기준 설정 및 측정 방법 개발을 위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농업이 기후변화협정에 완전히 포함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할 핵심 과제이다.
- 농가에 대한 정책은 소비자에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라벨링은 탄소 가격 책정과 함께 이루어지 않으면 소비자 선택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탄소 배출량이 배출원에서 측정되지 않으면 가격 역시 영농 방식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 라벨링과 탄소 가격 정책을 통해 농가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수단과 기술을 이용하지 않을시 판매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와 같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하다.

< 생산 측면에서의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

- 생산 측면에서, 농가가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영농 방법을 채택하거나 또는 낮은 수준의 탄소 배출 기준을 충족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 부과와 탄소 배출을 줄이는 토지 이용을 포함한 탄소 격리에 대한 보상도 농가 관련 정책이다. 노르웨이 등의 국가들은 축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초지 등의 토지 이용 개선을 통해 토양의 탄소 저장량을 높이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 농장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설비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연구지원이 필요하다. 농장에서의 탄소 저감, 토양 탄소 격리를 위한 연구, 정보 제공, 교육 및 훈련도 중요한 정책이다. 메탄 및 아산화질소를 줄이기 위해서 사료의 영양분 전환 향상, 사료 및 건초의 장내발효 개선과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토지의 적절한 보전과 이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태 친화적인 생산 기술 개발이다.

< 생산 및 소비관련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인가? >

- 이와 같은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조정이 중요하다. 탄소 발자국과 같은 소비자 정보 제공 또는 라벨링이 탄소 배출량 측정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연계되면, 이는 국제적 논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수출국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제적 협력과 조정이 없다면, 국가들은 탄소 가격 정책을 집행하기를 꺼려할 것이다.

- 국가간 협력과 조정을 통한 탄소 측정 및 정보 제공 방식의 표준화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제적 협력과 조정에 있어서 OECD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개도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 OECD 국가 및 신흥개도국이 농업에서 잠재적으로 감축이 가능한 온실가스의 70%와 산림벌채를 막음으로써 감축이 가능한 온실가스의 70%를 배출하고 있다.
 - 인도는 이를 위해 OECD가 비 OECD 국가들과 활발히 대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따라서 선진국만의 노력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개도국에서 산림벌채를 줄이고 토양 탄소 격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국제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포괄적인 배출 상한 및 배출권거래제도 등과 같이 시장 기능을 잘 활용하는 정책에 많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 의장은 회의를 정리하며 축산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체인 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다음번 회의에서는 온실가스의 측정과 관련하여 더 많은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3. 관찰 및 평가

- 금번 회의의 참석자들은 축산업이 직면한 이슈와 기후변화에 적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정책 수단의 채택 또는 배제 여부를 논의 또는 합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앞으로 필요하거나 실행가능한 정책

수단에 대해 그 효과와 집행상의 어려움, 극복 방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 향후에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나라에서도 축산업이 농업부문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경우 축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축산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한 금번 OECD 논의는 우리나라 축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번 논의에서 제기된 정책들에 대한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금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의 축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은 바, 향후 이와 같은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최신 논의 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 2010 OECD 농업각료회의 참석결과보고(전문 일부 수정)

2010.2.25(목)~26(금)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식품정책"을 주제로 한 2010 OECD 농업각료회의의 주요내용을 정리함(농림수산식품부 유병린 농업통상정책관(수석대표)외 서은수 서기관, 김종필 사무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 부연구위원, OECD 대표부 한동민 과장 참석)

1. 핵심요지

- 금번 각료회의는 1998년 이후 12년만에 개최되어, 30개 OECD 회원국 및 10개 비회원국 농업각료와 고위정책결정자 및 WTO, FAO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향후 20년간 농업과 식품분야가 당면하게 될 기회와 과제(opportunities and challenges)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하였음.
- 식량안보, 무역, 기후변화 등을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의 합치가 있었으며, 세계 농식품 시스템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음.
- 각료들은 식량 불안(food insecurity)에 대한 해결책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합치하였으며 생산·생산성 제고, 개도국에서의 인프라, 교육훈련, 시장발전 등을 위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각료들은 무역이 식량이 많이 생산되는 곳에서 그렇지 못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며, 규칙에 기반하는 다자 무역 시스템이 그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 동의하였음.

- 각료들은 기후변화가 식량 공급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였으며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였음.
- 금번 2010 OECD 농업 각료회의에서는 전 세계 인구에게 안전하고 영양 있는 식품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는 인식하에 식량안보,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식품분야의 정책원칙(Policy Principal for Food and Agriculture)』 과 『OECD 활동의 지침(Ministerial Guidance to OECD)』 으로 구성된 각료선언문(COMMUNIQUE)을 채택하였음.
- 각료선언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5년 이전에 OECD 각료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함

2. 관찰 및 평가

- 금번 각료회의는 1998년 합의된 정책원칙을 식량안보, 기후변화적응, 녹색성장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맞게 보완하여 국가와 OECD가 공동으로 농식품의 정책방향 모색하고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새로이 작성된 각료선언문은 향후 OECD의 정책분석활동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바, 각료선언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농업 분야 OECD 활동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세부내용

가. 각료회의 진행방식

- 각료회의는 2010.2.25(목)~26(금) 양일간 오스트리아의 Nikolaus

Berlakovich 장관과 뉴질랜드의 David Carter 장관의 공동사회로
진행됨.

- 1일차(2.25) 회의는 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과 공동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급변하는 상황에서 농식품 시스템의 도전과 과제”
에 대하여 각국 농업각료들의 인식과 대응을 발표하는 내용을 중
심으로 진행됨.

- Working Dinner를 통해 FAO, WTO, IPCC 등 국제기구 초청자
들의 발언과 각료들의 질의를 통해 식량안보, 무역, 기후변화 등
주요 도전에 대해 토의

- 2일차(2.26) 회의는 “세계 농식품 시스템의 기회와 도전에 대한 국
가와 OECD의 역할”에 관한 5개 세부그룹별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

나. 개회사

- OECD 사무총장(Angel Gurría)

- 농업을 포함한 식품체인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가를 OECD 국가들의 대표가 12년만에 함께 논의하
는 것은 현시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로서 경제위기,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식량안보, 가격변동성, 자원 희소성 등의 도전에 대한
해결책으로 혁신과 무역을 강조

- 공동의장

- Nikolaus Berlakovich(오스트리아 농업장관) : 세계가 직면한 농
업 분야의 세 가지 주요 이슈로 식량안보, 기후변화, 가격변동을
지적하고 식량분배,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농가소득 안전망 구
축의 필요성을 언급

- David Carter(뉴질랜드 농업장관) : 최근의 기후변화, 물 부족 등 농업의 위기와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술개발 및 혁신과 함께 시장개방이 핵심이며, 이는 20년 전 뉴질랜드 농업개혁을 통해 입증됨.

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농식품 시스템의 기회와 과제(opportunities and challenges) 토의 주요 내용

(주요국 발언내용)

- 호주 : 식량안보제고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식품생산 증가와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나 이 두가지 목표달성이 어려운 과제임을 언급. 대응책으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R&D에 대한 투자 증대, 개도국에 대한 농업 기술의 이전, 농업인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강조
- 미국 : 식량안보와 기후변화가 중요한 이슈이며 빈곤해결을 위해 생산성 증가, 식량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시장신호에 반응하도록 무역시스템 개선을 언급
- 캐나다 : 식량문제 해결, 농가소득 증대 등 현재 직면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역장벽제거, WTO/DDA 협상과 FTA 협상을 적극 활용 계획
- 유럽국가
 - 프랑스 : 세 가지 도전과제로서 식량안보, 자원환경 문제, 식량수급균형을 제시하고 특히, 식량에 대한 수요와 공급 조절을 위해 시장에 대한 정부정책 개입을 강조

- 스위스 :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 문제와 환경 문제 해결을 언급. 농업의 생산성 향상이 생태시스템 보전, 자연경관 유지 등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덴마크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공동의 노력과 OECD의 역할을 강조. 녹색성장 전략 수립은 OECD의 중요한 과제임을 언급
- 스페인 : 식량불안에 대응해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와 과학 기술 발전 그리고 제도 및 과정의 개선, 농업교육 훈련을 포함하는 혁신을 강조
- 스웨덴 : 식량부족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이산화탄소 및 축산폐수 감축, 위험관리를 위한 지식 축적, 올바른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녹색성장 전략 수립을 강조
- 벨기에 : 인구 증가, 자연 자원 희소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주요 축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균형 유지를 언급
- 영국 : 식품수요 증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등 자연자원 보존 등을 주요 이슈로서 지적하고 시장기능 활성화, 기술개발 등 혁신 및 생산성 향상 등의 필요성을 강조
- 그리스 :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환경적 발전을 위한 기회제공을 위해 녹색성장을 강조. 특히, 기후변화는 농업 및 식품체인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 강화 필요
- 슬로베니아 : 식량공급 증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민간과 공공부분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연구개발 및 협력과 기술 혁신 강

조

- EC :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안보,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주요 도전과제로 지적. 대응책으로서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 민간과 공공부문간 협력강화 등을 언급
- 노르웨이 : 농식품 시스템의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별 농업 생산의 다양성 유지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고려 필요
- 일본 : 농산물 생산성 증가 장애요인으로서 기후 변화, 물 부족 등을 언급하고 대응책으로서 식량안보, 선진국의 개도국(아프리카 등)에 자금과 기술지원을 통한 쌀 생산 증대 등 농업 개발과 지원 시스템 구축,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언급
- 남미국가
 - 칠레 :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성 감소와 식품안전 위협 등 광범위하여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인식. 식품안정과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개방이 필수적임을 언급
 - 브라질 :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교역 확대와 자율적인 시장기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바이오에탄올 등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관심 증대 도모
 - 아르헨티나 : 빈곤 및 영양 결핍과 같은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 혁신, 물 과 토양 등 희소한 자연 자원의 보전, 생산성의 증대,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개방 확대가 중요함을 언급

(한국 대표 발언 요지)

- 정책입안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3가지 이슈로서 1)안전하고 충분한 식량공급 2) 농업분야 R&D 투자 확대 3) 지역개발을 통한 농업과 비농업, 도시와 농촌간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
- 농업의 일차적 기능이 충분하고 안전한 식량공급임을 강조하고,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이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R&D 투자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소개
- 다양한 형태의 농업이 공존(Co existence of various types of agriculture)하는 것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개념이 다자무역 체계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도농간 발전격차의 경험을 토대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과 농업과 농촌개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도농간 균형개발의 중요성을 강조

라. Working Dinner

- 급변하는 상황 하에서 농식품 시스템의 역할 및 과제에 대하여 FAO, WTO, IPCC,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초청자들의 발표를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 Hafez Ghanem (FAO 부총장) : 전 세계적으로 10억 이상의 영양 부족한 사람들이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살고 있음.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저소득국가의 취약한 농업생산체계를 더욱 악화시킬수 있음. 취약한 지역에서 식량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경제 및 세계 교역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
- Pascal Lamy(WTO 사무총장):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공급을

위해 무역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특히 세계 식량공급이 소비자의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토록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국제교역 시스템 필요성을 언급하고 DDA논의에 대한 조속한 결론이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국제교역을 강화하는데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Jean Pascal van Ypersele(IPCC 부총장): 이산화탄소 배출증가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농업생산성 및 식량불안을 지적. 특히 기후변화는 개도국 농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온실가스배출 저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기술 연구 및 개발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와 국내외 농업 연구협력 강화를 언급
- 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 빈곤 감소와 자원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비료, 농약 등)을 통한 농업혁신과 효율적인 기술 및 노하우 전달체계를 강조. 이를 위해서 새로운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과 지적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언급. GMO는 소비자로부터 신뢰확보가 우선 과제임.

마. 세계 농식품시스템의 기회와 도전에 대한 국가와 OECD의 역할(그룹별 토론)

○ A그룹(토론 주제 : 미국/한국 등 9개국)

- 식량안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탄소시장 형성 등 국제적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고 국가별 차이를 고려한 정책 추진이 중요. 또한 국제교역,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이 필요하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중요한 요소이나 무역왜곡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됨. OECD 역할은 가격변동성 연구, 개도국 지원, 생산비 분석, 농가위험 관리 등에 비중을 두어야 함.

(한국 대표 발언내용)

- 식량안보는 최근 수출국의 수출 제한 조치 예에서 보듯 무역으로만 확보될 수 없고 적절한 국내생산이 함께 해야 하며,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해결책으로서 다양한 농업방식 유지의 중요성이 다자간 협상에 반영되어야 함.
 - 생산량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이 큰 얇은시장(Thin market)의 경우 생산량 변화가 적더라도 국제 가격변동이 클 수 있으므로 가격변동성의 원인분석에 있어 품목별 생산 및 시장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중요함을 강조
- B그룹(토론 주제 : 칠레/오스트리아 등 8개국)
- 식량안보 해결을 위해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고 연구 기술개발과 소비자 역할이 중요함. 또한 시장보호를 경계하면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실행을 언급. OECD의 역할로서 연구, 혁신, 기술이전, 위험관리 등을 강조
- C그룹(토론 주제 : 남아공/아르헨티나 등 9개국)
- 식량안보는 국가별 상이한 여건을 고려한 다른 전략이 필요하고 생산성과 무역이 중요한 관심사이고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OECD의 역할은 문제분석, 정책선택, 과학적 분석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D그룹(토론 주제 : 아일랜드/핀란드 등 9개국)
-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가격변동성을 중요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기술혁신과 기술이전, 투자(물적, 인적)가 중요하고 농업이 가지는 공적 이미지(public image)를 개선해야함. OECD의

역할은 경제회복에 있어 농업의 역할이나 푸드 체인, 위험관리 등에 초점을 두어야함.

○ E그룹(토론 주제 : 스위스/호주 등 8개국)

- 식량안보를 위해 생산성 증가, 경쟁력 있는 농지선택, 시장 개방, 기술혁신,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등이 중요. OECD의 역할은 녹색성장, 가격변동성 대응, 농가 위험관리, 바이오 연료연구, 개도국에 대한 투자 지원 등에 초점

바. WORKING LUNCH: Co-chairs' Summary 및 각료선언문 채택

- 금번회의에서 논의된 세계 각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유용하고 실천적인 대응방안들을 정리한 별첨 의장보고서(chair's summary)와 각료 선언문을 채택함.

○ 의장보고서 주요 내용

- 식량안보 : 식량 불안(food insecurity)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 강구에 의견 합치. 생산과 생산성 향상이 농업시스템의 모든 범위에서 증가될 필요. 개도국에서 인프라, 교육훈련, 시장발전 등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투자가 필요
- 무역 : 농식품 가격 불안 해소를 위해 개방되고 투명한 시장으로의 접근은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게 중요하고 "얇은 시장(thin markets)이 농산물 국제가격의 급변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효율적인 무역증진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DD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이 필수적임.
- 기후변화 : 식량 공급에 부정적 영향(특히 개도국)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
- 자원제약 : 물, 토지 등 자연자원 제약은 농업이 식품 수요증가에

대응하는 능력을 크게 제약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특히 물부족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임.

- 혁신 :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정책을 만드는데 기술개발과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과 기술의 이전과 적용의 중요성이 강조. 정부는 민간부문과 함께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 투자하고 기술의 자유로운 유입이 가능하도록 시장개방의 중요성을 인식함.
- 규제와 새로운 기술 : 국가들간에 규제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태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주목. GM 기술은 일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업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와 자원압력의 상황에서 수요증가에 대응하는 것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가격 변동성 :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의 원인 중 하나인 투기의 영향정도와 해결책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표출되었으며, 향후 가격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인과 농가의 위험 관리 전략이 더욱 시급
- 시장지배력 : 시장지배력 차이로 인해 농업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에 관심이 표출됨. OECD가 투명성 증가와 시장기능의 제고를 위한 대안을 분석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 적절한 규제의 골격이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함.
- 농업의 다원적 기능 : 노르웨이, 일본, 한국 등의 국가들은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언급. 뉴질랜드, 호주 등은 다원적 기능을 다루는 정책이 생산과 투자결정 또는 무역을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하게 촉구
- 바이오 연료 : 식량 가격에 대한 영향, 희소한 농업 자원에 대한 경쟁, 온실가스의 감축가능성, 바이오매스 생산의 전망과 기회 등

이 토의됨. 유용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나 견해의 차이도 분명히 상존함.

- 농업에 대한 인식과 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대응 : 장관들은 농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 식품 품질, 동물 복지, 환경적 조건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의 증가와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라벨링의 중요성이 언급됨
- 음식물 쓰레기 : 음식쓰레기가 식량 손실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과 식품 구매자에 대한 교육, 소비자 가격 변경, 음식 쓰레기 활용 등과 같은 정책이 식품 공급 증가 압력 완화와 환경 개선 등의 편익을 발생시킬 것임을 인식. 개도국에서는 부적당한 처리, 운송, 마케팅 인프라로 인한 손실제거가 식량 안보 성과를 개선할 것임

○ 각료 선언문

- 각료 회의 준비 과정에서 회원국간 사전에 실무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각료차원에서 확인하고 거의 그대로 채택함.
- 다만 OECD 활동을 위한 각료 지침(Ministerial Guidance to OECD) 중 (vi)항 안에서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to insure transparency and efficient functioning of markets) 문구를 추가기로 합의함.